

다산포럼

박근혜정부의 경제개혁은 실패했다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과 교수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앞당겨 박근혜 정부 5년의 경제 정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본다. 남은 임기 중에 현 정부의 특성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평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공감받을 것 같다. 하나는 이전의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남 탓' 하기를 잘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본인이 가장 강한 어조로 가장 많은 횡수에 걸쳐 '개혁'을 부르짖은 정부라는 점이다.

지난해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두고 비판이 일자, 정부 관리들은 세계 경제의 악조건부터 서두에 내놓았다. 중국의 저성장과 금융 변수 불안,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의 수요 감소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도 덧붙여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도 단골 메뉴이다. 그 전에는 세월호 사태가 가져 온 소비심리 위축도 지적되었다.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리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이 오히려 그보다 앞선 원인이라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제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할라치면, 국회 탓 야당 탓부터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만 쟁쟁해 보더라도 대통령실 공개적으로 직접 국회를 비난한 횡수가 일주 20여 차례다. 국회와 야당이 몇 가지 '자칭' 개혁 법안 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와 야당이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은 총선 슬로건으로서도 비할 바 없어 쓸모가 있겠지만 정작 실제 개혁에 쓸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 '자칭' 개혁 법안이나면, 그 법안들이 어떤 경로로 경제에 작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국민에게 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에서 나올 이익과 손실을 관련 사회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부담할지 가능할 수 없게 한다.

예를 들어 해고의 자유화가 진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한국 경제가 재발과 수출에 의존한 채 노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KT가 빠지고 현대중공업이 새로 포함된 한 가지 경우를 예외로 하면,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그룹의 구성이 10년 전과 똑같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이 2006년부터 순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이 현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최근 세계 400대 부호를 선정해서 발표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에 포함된 한국인 5명이 모두 상속자, 다시 말해 재벌 2·3세대. 한국 경제의 이러한 고착된 기조는 질서가 자유로운 해고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계 400대 부자의 65%가 창업자였고, 미국은 125명 가운데 89명이 자수성가한 부자라 했다. 10년을 잃었으니 20년을 잃었으니 하는 일본조차도 포함된 5명이 모두 새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물려받은 기업과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경제는 기존 기업집단의 이

해관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진입 장벽을 강고하게 쌓아 가는, 다시 말해 노쇠해 가는 구조를 갖는다.

개혁의 결과라고 내세운 것이 '창조경제 만들기'다. 전국에 17개 창조혁신센터를 만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그것을 재발들에게 맡겼다. 이 센터들이 그냥 놀았다는 말처럼 들리는 보도가 있었다. 센터당 하루 기업 지원 건수는 평균 0.12건, 경영상담은 0.7건이었다. 스스로를 파괴해야 가능한 '창조경제'를 재발 손에 맡겼다는 데서 충분히 설명되는 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성공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자들이 박근혜표 창조경제를 맡았다.

재벌이 대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백화점·아웃렛·면세점 확대였으며, 아파트 분양사업이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상실하는 이유의 밑바탕은 재벌에서 기인한다. 이를 도외시하는 한 박근혜 표 경제 개혁은 2년 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광주 3·15의거’ 세워 4·19역사 바로잡자



김영웅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는 비로소 혁명으로 복원됐다. 이 과정에서 역사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것이 '광주3·15의거'다.

4·19혁명은 전개과정에서부터 잘못 표기돼왔다. 4·19혁명사의 왜곡지점이 바로 광주3·15 금남로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로 빠트린 것이다. 그래서 현재 4·19는 시작이 없는 사건처럼 되어 있다. 4·19혁명의 시작은 광주 금남로에서 비롯됐다. 그것이 바로 1960년 부정선거를 최초 규탄했던 광주 금남로의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로 4·19혁명의 첫 봉화(烽火)였기 때문이다.

1960년 3월 15일 선거전야, 전남의 민주당원과 시민들의 걱정은 선거투표장에서 의 당원들과 참관인의 신변 문제였다. 여수·광산에서의 민주당원 살인사건은 투표참관인의 추천까지 어렵게 했고 선거거부위를 온갖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15일 아침부터 민주당 참관인의 투표소 입장이 거부당하고, 쫓겨나고, 어떤 곳에서는 누르자가 투표통지서를 요구하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보고 등이 잇달았다. 당시 광주시 77개 투표소의 분위기는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했다. 투표소 백미터 이내에는 자유당 완장부대와 반공청년부대가 여기저기 배치돼 있고 민주당원의 출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극도로 흥분한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주권을 포기한 채 선거사무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급기야 12시 45분 광주 금남로 4가 민주당 선거사무실 앞 1200명의 시민 합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수백 명의 폭력경찰은 경찰국을 향해 밀고 오는 데모대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붙들고 밀고 곤봉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데모대는 해산은커녕 '우리들의 발걸음을 막는 자 누구냐'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나' '자유당의 앞잡이 불쌍한 괴한들이 물러가라'고 피를 뿌리듯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자' '민주주의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며 땅바닥에 쓰러져 구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실이 민주당 중앙본부에 보고됐고 그 사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광주 금남로의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오후 3시 40분경 마산 3·15의 불

길로 피어올랐다. 바로 4·19혁명의 도화선이다.

역사 왜곡과 결핍에 가려져 묻혀버릴 뻔한 이 광주 금남로의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 진실은 동아·한국·조선·부산 일보, 옛 전남일보 등에 모두 보도됐다. 사진도 남아있으며 주역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증빙자료를 이 반드시 4·19혁명사와 한국 민주운동사에 편입돼야 한다.

'민주주의 쟁투와 통일'이라는 4·19혁명의 목표와 가치도 광주 3·15의거의 기승전결(起承轉結)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과제 앞에 역사는 부인치 못할 것이다. 4·19혁명의 첫 봉화(烽火)와 첫 피(血) 광주 금남로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4·19혁명의 시원(始原)으로 바로 서도록 광주3·15 의거 56년을 기해 이 지역 행정기관과 학계·언론계·사회계 모두 힘을 다시 모아 나서야 한다.

광주3·15의거로 비롯된 4·19의 바른 역사는 바로 국가 정체성이고 통일 동력이다. 역사 복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렵다.

정춘 특·특

세종대왕 후예다운 글쓰기를



김초희
송남대 언어치료심리학과 2학년

이다. 휴식시간에도, 자고 일어나서도 스마트폰과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스마트폰이 내 주인이라는 착각마저 든다.

너무도 편리한 스마트폰이지만 딱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SNS에서 접하는 글 중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리는 것은 물론, 비속어나 축약어 등 언어파괴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언론이라는 인터넷 뉴스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손가락으로 작은 화면 속 버튼을 눌러 글자를 입력하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또 써놓은 글을 확인하는 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언어파괴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통화를 대신해 짧은 글로 재빨리 소통하려다보면 아무래도 오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정도에 그치는 일이라면 불편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음에도 맞춤법

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한 채 글을 쓰는 경우가 문제다.

대표적인 시옷(ㅅ)을 쓰는 경우다. '있었다'를 '잇었다'로 표기하는 것이다. '안돼'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데 '안되'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정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 라면 모를까 소리나는 그대로 쓰는 일도 있다. '~하겠습디다'를 '~할게요'라고 말하다. 많은 이들이 이런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같이 스마트폰을 쓰는 입장에서 올바르게 쓰는 맞춤법을 사용해도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때문인 것 같다.

언어파괴도 문제다. 신조어, 비속어, 은어, 축약어 등은 그야말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스마트폰에서 조금 더 빠른 의사전달을 위해서나, 또래 친구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

도 이해한다. 감ભ(깜짝놀라다)처럼 같은 짧은 글에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 유용하기도 하다.

하지만, 태생울 알 수 없는 단어들도 많다. 아예 모음을 떼어내고 자음만 길게 쓰는 경우도 있다. 더 심각한 건 어느 나라 말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소위 '외계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걱정스럽다. '앞으로똥썩우지말구 계속힌내개지내'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계속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다.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은 최근 들어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자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 한글을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터넷 글쓰기 문화를 만들고,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소한 부분, 잘못된 습관을 차근차근 바로잡고 '나'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위대한 세종대왕의 후예답게 아름답고 바른 글쓰기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社說

금남로 조각상 이전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다

광주시와 동구가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각상 수습 작업을 '예술의 거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이유는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문화전당권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금남공원 사거리 구간 인도 양쪽에 설치돼 있는 조각 작품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이전한다고 한다. 광주시 등은 이달 말 착공해 다음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남로 조각상이 거리의 역사성이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보행시 불편도 감안하여 금남로 조각상을 15년 만에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각상들이 옮겨질 예술의 거리 역시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이 갖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비좁은 곳

에 작품 수습 점을 몰아넣는 방식이다. 따라서 또 다시 교통 불편 및 작품 파손과 관람 장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작가는 "작품들을 창고에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한다. 이 작가는 대신 "공원 등으로 이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성환 동구청장 재선기 예비후보(국민의당)도 "문화특구라는 동구의 이미지에 걸맞게 조각 작품의 특징을 살리고 문화적 효용가치를 다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앙초등학교를 사이에 둔 예술의 거리를 '명품 조각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보다 넓은, 좀 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것인지 시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조각상 이전이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급한 현안도 아니지 않은가.

사기 혐의 잠적 구의원에도 세비 지급했다니

노사 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바로 지방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세비는 챙긴다.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두 달 동안 잠적한 A의원에 게 600만 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본회의 참석 이후 자취를 감췄고 지난달 20~28일 열린 임시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광산구의회는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의원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끊겨 기소중지 처분했다"는 통보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에게 월정수당 190만7320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300여 만 원씩을 지난 달 20일과 지난 19일 계좌로 지급했다. 아무런 활동이 없었지만 세비로 고스란히 600만 원을 내준 것이다.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

련 규정을 살펴보니 법에 맹점이 있다. 지방의원이 계속 회의 등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는 지급제한 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의사당을 비워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 6월 '재력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급 제한 조례를 만들었다. 구속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급해 돌려준다"는 조례를 국내 최초로 통과시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 정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세비 반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처럼 불출석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규정을 손질해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축내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4년 1월 중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마치고 하산하던 길이었다. 학교는 해발 4060m의 팜보체 마을에 자리하고 있었다. 히말라야8000m급 16좌(座)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세우는 16개 '휴먼스쿨' 가운데 첫 번째 학교다. 운동장에서 자 코발트 빛 하늘 아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의 아마다블 람(해발 6812m)과 설

렁게 말했다. "언젠가부터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고, 그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다. 히말라야에 학교를 지어 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는 첫 학교를 어느 곳에 세울까 고민하다 팜보체 마을로 결정했다. 그곳은 1986년 그의 두 번째 에베레스트 원정 때 크레바스에 빠져 유명을 달리한

휴먼스쿨

세르프와 슴핀 도르지의 고향이었다. 이렇게 해서 엄 대장은 '히말라야와의 약속'을 이 등장은 히말라야에 등장을 도전할 때마다 "꿈을 이루게 해 주시면 살아남은 자로서 히말라야를 위해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되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22년 동안 히말라야 8000m급 고봉에 38번 도전해 18번 실패하고, 20번 성공했다. 1998년 안나푸르나에서는 설사면에서 미끄러지는 셰르파를 구하려다 오른쪽 발목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도전 끝에 꿈을 이뤘다.

엄 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 이

엄 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 이

엄 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 대해 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